일반논문

권력자본론의 관점에서 피케티 급진화하기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논문요약〉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출판된 이후, 이제 피케티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불평등 문제를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피케티는 자신이 자부하듯 독특한 방식으로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함으로써,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경향이 자본주의적 발전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자본주의의 장기동학에 관한 그의 이론화 작업은 『21세기 자본』이란 책 제목이 불러일으킨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다. 실증적 데이터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는 과정에서 주류경제학의 이론틀을 사용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자본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류 경제학 방법론의 근본적 문제점도 떨쳐버리지 못했다. 이 논문은 피케티의 이론적 실패가 자본 개념과 가치이론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에 기인했다고 보고, '권력자본론'이란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자본주의 동학을 설명함으로써, 피케티 자본론의 이론적 맹점을 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복하고, 그가 제시한 실증적인 분석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고자 한다.

■ 주요어: 불평등, 권력자본, 차등적 축적, 피케티

1. 들어가며

현재 세계 자본주의체제가 처해 있는 장기침체의 근원으로 불평등 심화가 지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패닉 이전에도 불평등 심화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불평등 논의는 '피케티 현상'이란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700페이지 분량의 사회과학 서적이 전 세계적으로 15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France24 2015/01/02). 이제 『21세기 자본』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펼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케티는 자신이 자부하듯 독특한 방식으로 2백 년 이상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구해 분석함으로써,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경향이 자본주의 발전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그의 연구가 높은 학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책이 일으킨 '신드롬'만큼이나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장기동학에 관한 그의 이론화 작업은 『21세기 자본』이란 책 제목이 불러일으킨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다. 피케티는 실증적 데이터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는 과정에서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사용함으로써, 마르

크스주의 자본론을 뛰어넘기는커녕 자신이 비판한 추상적 수학적 방법론의 한계 속에 머물고 말았다. 이 논문은 피케티의 이론적 '실패'가 자본 개념과 가치이론에 관한 문제의식의 부재에 기인했다고 보고, 닛잔과 비클러(Nitzan, Bichler 2009)가 발전시킨 '권력자본론'이란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자본주의 동학을 설명함으로써, 피케티 자본론의 이론적 맹점을 극복하고, 그가 제시한 실증적인 분석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그동안 제기되었던 『21세기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란을 검토하면서, 제임스 갤브레이스(Galbraith 2014)가 『21세기 자본』에 대한 서평에서 부각시킨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이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문제의 핵심임을 설명한다. 이어서 닛잔과 비클러의 '권력자본론'이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에서 제기된 자본 수량 측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본주의 동학에 대한 현실적 분석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권력자본론에서 제시하는 상대적인 자본축적을 의미하는 차등적 축적 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하면서, 피케티가 보여준 상위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이 자본주의 축적 동학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적 자본의 차등적 축적의 결과물이란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권력자본론이 『21세기 자본』을 둘러싼 이론적 논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하며 글을 마치겠다.

2. 21세기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란

김공회(2014, 29)가 언급했듯이, 피케티가 "불평등의 원인을 '나쁜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에 내장된 메커니즘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기존 "불평등 논자들"의 연구와 구별된다. 이는 "신고전학파의 등장 이후 경제학이 잃어버렸던 자본주의의 장기동학에 대한 분석을" 되살려내려는 시도로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류동민 2014, 225). 이 측면에서 볼 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지닌 진정한 의미는 모든 독자들을 압도해 버린 엄청난 데이터보다는 새로운 자본론의 완결성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른바 피케티 신드롬은 세계 주요국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에 관한 피케티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국한된 현상이었다. 그가 제시한 두 개의 "자본주의 기본법칙(즉, $\alpha = r \times \beta$와 $\beta = s / g$)"과 "자본주의 중심적 모순(즉, $r > g$)"이라는 자본주의 장기 동학은 주류경제학과 좌파정치경제학 어느 쪽으로부터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1] 한편 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정치·사회적 의미를 선전하고자 했던 입장들은 이론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의식이 부재했다.

좌파정치경제학과 주류경제학에서 공히 제기하는 피케티의 주요 문제점은 자본개념에 있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2014, 61)는 자본을 "비인적 자산의 총계"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부동산(거주용 부동산 포함)과 금융자본 그리고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사업 자본(공장, 사회기반시설, 기계류, 특허권)이 포함된다." 이는 모두가 지적하듯 재산(혹은 자산 또는 부)의 개념으로서, 상품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실물 수단, 즉 자본재로 정의하는 전통적 (정치)경제학의 자본개념과는 다르다. 다르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문제는 피

1) 여기서 α는 자본소득분배율, β는 자본/소득 비율, r은 자본수익률, s 저축성향, g는 소득증가율.

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어떤 자본(과 소득) 개념을 쓰고 있는지를 밝힐 뿐, 자본주의 동학과의 연관 속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신의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지도 않는다. 피케티는 자본주의 장기동학을 정식화하는 과정에서 주류경제학의 생산함수에 기반을 둔 모델링을 전개하는데, 이때는 자본을 자본재에 국한한다(Soskice 2014). 그 결과,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1법칙과 제2법칙에는 상이한 자본개념이 사용된다(홍훈 2014).

이런 일관되지 않은 자본개념의 사용은 피케티가 주류경제학의 "추상적 수학적인" 방법론을 비판하며 밝힌 자신의 접근방식을 스스로 거역한 결과이기도 하다. 피케티(2014, 692-6)는 "경제학을 역사학·사회학·인류학·정치학과 더불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본다"고 말하며, 자신은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가 정식화한 자본주의 동학은 주류경제학의 추상적 수학적인 방법론을 따라 이루어진다(Soskice 2014, 652). 피케티는 자신이 발견한 $r > g$라는 통계적 사실이 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필연성을 보이기 위해 β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주류경제학의 성장모델에서 가져오는데, 그 안에는 역사학·사회학·인류학·정치학을 위한 자리는 전혀 없고,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과 성장률이 자본주의 동학을 결정한다.

그렇다고 피케티의 이론적 정식화가 주류경제학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다. 『21세기 자본』이 파란을 일으키자, 그 책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제기된 데이터 오류의 지적은 무시할 만한 주변적인 내용이었지만, 이후에 제기된 체계적 비판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었다. 레이(Ray 2014, 3-4)에 따르면, 첫째, 제1법칙은 단순한 항등식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결과이지, 어떤 요인을 밝히는 위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있지 않다. 둘째, 제2법칙은 해로드-도마 방정식으로서 제한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반증 가증한 이론이 되는데, 해로드(Harrod)나 솔로우(Solow)와는 달리 피케티는 아무 제약도 달지 않는다. 셋째, 자본-산출비율의 상승에 대한 인과율을 성장률에서 찾는데, 성장률은 자본-산출비율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과율의 시작점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

레이는 자본주의 중심적 모순이라는 $r > g$도 "동적인 변수인 성장률과 정적인 변수인 수익률의 단순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말하며, 그것이 실증적으로 참이든 아니든 불평등에 관한 결정요소로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유종일 2014, 230). $r > g$이든 $r < g$이든 그 자체는 "소득과 부가 개인 혹은 그룹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아무 것도 이야기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Ray 2014, 4).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주류경제학 쪽의 문제제기는 피케티가 실증적으로 보여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β값의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두 개의 상이한 자본개념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β의 상승이 주로 주택가격의 상승에 기인했다는 것이 요지다. 다시 말해, 피케티의 실증적 분석 결과에서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다면, β값에 별 변동이 없음이 드러난다(Bonnet, Bono, Chapelle, Wasmer 2014; Rowthorn 2014). 주택가격의 상승이 불평등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요지는 "피케티 모델은 불평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명료하지 않은데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설명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Soskice 2014, 653).

관점은 아주 다르지만, 주류경제학과 좌파경제학은 이 부분에서 교집합을 이룬다. 좌파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위의 지적은 한편으로 피케티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기각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과 피케티의 자본 개념

을 대비시켜 후자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자본을 단순히 물질적 부가 아닌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생산양식"이라고 정의한 마르크스의 자본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의 부를 자본이라고 정의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 좌파정치경제학 쪽에서 피케티에게 제기하는 비판의 요지이다(Roberts 2015; Callinicos 2014; Harvey 2014; Tengely-Evans 2014; 김공회 외 2014 참조). 피케티의 자본개념은 자본주의의 동학, 즉 자본이 가치의 유일한 생산 주체인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함으로써만 가치를 축적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착취를 통해 팽창해야지만 굴러간다"는 사실을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Tengely-Evans 2014, 181). 다시 말해, 피케티는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창출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몰역사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자본의 운동법칙"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Roberts 2015, 92). 좌파정치경제학 쪽에서 보기에, 이런 피케티의 잘못된 자본개념이 한편으로 이윤율 저하 경향의 기각이라는 오류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정책으로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정치적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다(Harvey 2014, 85-86).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피케티에 대한 주류경제학과 좌파정치경제학 쪽의 문제제기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21세기 자본』의 취약점을 잘 들춰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아래에서 다시 상술하겠지만, 주류경제학 쪽은 『21세기 자본』의 이론적 취약성이 자신들의 자본개념/한계효용론/생산함수/성장모델의 한계에서 기인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불평등 심화가 정당한 것인 양 피케티에게 "그래서 뭐(so what?)"라고 되레 큰소리치고 있다(Mankiw 2015). 한편 피케티의 자본론이 가치의 생산, 노동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들에 대한 자본의 착취, 자본들 사이의 경쟁 그리고 자본의 축적위기와 회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좌파정치경제학 쪽의 한결같은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이윤율 및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통해 자본주의의 동학을 밝힌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이정구 2014, 123)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자본을 사회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19세기 상황에서 만들어진 노동과 자본이라는 단순화된 권력관계 모델을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이후의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해온 사회적/정치적/문화적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론이 요구된다. 이제 피케티 이론의 핵심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적 접근방식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3.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과 『21세기 자본』의 급소

『21세기 자본』에 대해 쏟아졌던 여러 논평 가운데 그 이론적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건드린 것은 제임스 갤브레이스(Galbraith 2014)의 서평이었다. 갤브레이스도 앞에서 언급했던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1법칙과 제2법칙에서 상이한 자본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문제를 이른바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Cambridge Capital Controversy)의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은 1960년대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과 피에로 스라파(Pierro Sraffa)가 미국 케임브리지(매사추세츠 주) MIT의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과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 등에게 주류경제학의 근간인 자본재로서 자본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개된 논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존 베이츠 클라크(John Bates Clarke)에서 시작해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 솔로우-스완(Solow-Swan) 성장모델에 이르기까지, 한계효용이론에 기초한 주류경제학의 주축 이론들이 사상누각에 불과했음이 판명되었다. 이들 이론들이 성립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의 수량 측정조차 불가능함이 드러난 것이었다. 피케티도 『21세기 자본』(277-80)에서 이 논쟁을 언급하고 있지만, "영국 학자들이 제기한 이 의혹에 실제로 타당한 근거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논쟁의 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균형성장 조건과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 등 피케티가 의존하고 있는 주류경제학의 성장모델과 생산함수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게 이 논쟁의 요지였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신고전파경제학은 한계생산성 이론에 바탕을 두고 산출량을 두 가지 상이한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함수로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Q = Af(K, L)$로 생산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Q는 산출, A는 총요소생산성(또는 기술수준), K는 자본, L은 노동을 뜻한다. 이 함수에 따르면, 임금은 한계적으로 노동이 기여한 만큼의, 이윤은 자본이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이다. 임금은 차치해 놓고 이윤만을 따져보면, 경제 전체에서 자본가의 정당한 이윤은 이윤율 곱하기 자본수량으로 구해질 수 있다. 그런데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전제를 수용해 (정상)이윤율을 얻는다고 해도, 자본의 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찮다. 자본재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은 나사못, 망치, 드라이버에서부터 공작기계, 로봇, 컴퓨터, 플랜트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것들을 공통의 단위로 측정하여 하나로 합칠 방도가 없다. 자본의 생산적 기여와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인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윤을 말하려면, 먼저 함수에 투입요소로 들어가는 자본의 수량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첫 단계부터 막혀버린 것이다.

물질적 단위로 자본의 수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고전파는 해결책으로 다양한 자본재의 금전적 가치 총량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오히려 효용가치론에 치명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제로 삼은 이윤과 자본 수량의 관계를 뒤집어놓기 때문이었다. 신고전파경제학에 따르면, "자본의 가치는 자본의 수익성에 달려 있고, 자본의 수익성은 자본의 생산성에 의해 규정된다"(Hunt, Lautzenheiser 2011, 436). 이 논리에 따르면 자본의 가격은 자본 소득을 현가화(capitalized)한 가치로 정의되며, "자본이 미래에 가져다줄 전체 기대 이윤을 [정상이윤율로 나누어]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효용 이론의 애초 전제는 자본의 수익성이 사용된 자본재의 양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즉 자본의 양이 늘어나면, 한계효용 법칙이 작동해 수익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 근본 주장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수량 측정 문제를 가격이라는 보편적 척도로 통일해 풀어보려던 신고전파의 해결책은 효용 이론의 주요 전제를 위배하면서 순환논법에 빠져버렸다.

자본의 수량 측정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신고전파 이론 전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신고전파 이론의 핵심인 한계효용이론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이다. 자본 총량을 측정하지 못하면, 한계생산성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자본 투입량의 (노동의 수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측정했을 때)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주장도 무의미해지며,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본 비용이 줄어 노동대신 자본을 더 많이 채용하니까) 노동 대비 자본 비율이 올라갈 것이란 주장도 의미가 없어진다(앞의 글, 439). 스라파(Sraffa 1960)는 이른바 재전환(reswitching) 분석

을 통해 이를 예증함으로써 주류경제학의 생산함수를 철저히 기각했다.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을 통해 신고전파 경제학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남겼다. 적어도 한계효용이론에 기초한 생산함수와 성장모델을 당연한 듯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21세기 자본』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통계적으로 r이 5퍼센트 전후의 역사적 평균을 보이며 $r > g$가 유지되었든 안 됐든, 주류경제학의 생산함수와 성장모델에 의존해 그 수치들과 구조적 불평등 사이의 인과율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피케티가 한 것처럼 통계수치를 가지고 $\alpha = r \times \beta$와 $\beta = s / g$에 넣어 그 결과값들이 어떤 장기시계열 변화를 보였는가를 파악하는 작업 그 자체는 훌륭한 분석이다. 현실을 읽어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뜻에서 그렇다. 하지만 앞에서 인용했던 레이의 주장처럼, 문제는 피케티의 자본주의 기본법칙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모두 "결과들"이란 점이다. 지니계수나 5분위 배수처럼 현상의 변화들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들 자체에서 자본주의 동학을 설명하는 인과율이 구성될 수는 없다. 자산가치, 자본수익률과 비중, 저축률, 성장률 모두 그 동인이 설명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이 결과들은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방식의 설명을 요구하는데, 그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류경제학의 틀에 안주하며 '편안한' 정식화 방식을 택했다.

정리하면, 피케티는 유효하지도 않은 주류경제학의 생산함수에 통계데이터를 넣어 자본주의의 (불평등) 동학을 정식화하는 우를 범했다. 피케티는 $\alpha = r \times \beta$와 $\beta = s / g$라는 두 등식을 이용해(결국, $\alpha = r \times s / g$) β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α값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습자본'과 '임노동'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적으로 정식화하려고 했다. 21세기 불평등 심화를 확정적으로 추론한 그의 결론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지만, 주류경제학의 추상적·수학적 모델에 의존한 그의 이론적 정식화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다. 접근방식 차원에서 보자면, 피케티 자신이 강조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분석방식에서는 회계적 항등식과 자본주의 동학의 함수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의도치 않았겠지만, 피케티는 '불평등의 증가가 성장률 하락' 때문이란 결론을 제시하고 말았다.[2]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설명의 유효성조차도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에서 제기한 자본 수량 측정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정합성 있는 자본개념과 가치론 없이 자본주의 동학을 밝힐 수 없음을 의미한다. 피케티는 개념적으로 별 고민 없이 주류경제학의 이론틀에 의존하면서, 자기가 중요시한다고 밝힌 복합적인 사회과정을 자본주의 동학 속에 포괄해내지 못했고, 불평등의 권력적 기원을 간과해 버리고 말았다.

4. 자본에 대한 권력적 접근

문제의 정곡을 찔렀던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에서 다시 출발해 보자. 자본주의 동학에 관한 피케티의 이론적 정식화를 무의미하게 만든 자본 수량의 측정 실패는 우리를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 선택의 갈림길에

2) 피케티는 저축률 s가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g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그리고 r은 역사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기에), 위의 두 항등식에 따라 당연히 β와 α가 증가한다.

서게 만든다. 그 원인이 단순한 수학적·기술적 한계에서 기인했는가, 아니면 자본개념 자체의 근본적인 오류에서 비롯되었는가? 지금까지 주류 개념 틀 속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단 사실은 후자에서 답을 찾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물질적 생산수단이란 자본개념이 아니라, 피케티가 하고 싶었던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과정을, 특히 그 기저에 깔린 권력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자본개념에서 다시 출발해 자본주의 (불평등)동학을 정식화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자본을 "사회적 관계"로 보는 좌파정치경제학적 접근방식이 대안적 출발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성장률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인과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사회그룹들 사이의 역관계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낳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에게서 피케티로 가는 연구방향"(류동민 2014, 237)을 찾으려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좌파정치경제학계는 오래전부터 피케티가 주장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자본의 동학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실제 축적 분석에서는 노동가치론에 입각해 지나치게 노동과 자본의 '착취관계'에 매몰된 경향을 보였다.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과정을 자본축적 분석 속에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분석틀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불평등의 심화와 자본축적의 연계성을 파악하려면, 노동과 자본 관계의 총량적 분석과 더불어 노동 내의 분화와 자본 내의 분화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축적분석에서는 차등화에 대한 분석이 이론적으로 잘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자본을 권력으로서 이해하는 진정한 '21세기 자본론'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마르크스주의 자본론의 한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그 해법으로서 닛잔과 비클러(Nitzan, Bichler 2009)가 제시한 이른바 '권력가치론'에 기초한 새로운 자본이론의 기본 특성들을 요약해 설명하겠다. 간략히 말하면, 닛잔과 비클러는 자본의 실체적 내용이 흔히 '죽은 노동'이라고 표현되는 물질적 실체(즉, 기계나 생산설비)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사회적 과정 전체를 규정하고 통제해가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적 복합체**이며, 그 기본 조직단위인 기업의 가치, 즉 **자본화**(capitalization)란 형식으로 자본가 지배계급의 상대적인 사회 통제 역량이 화폐가치로 상징화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닛잔과 비클러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가치체계가 사회적 과정 전체에 대한 자본가들의 장악력을 화폐가치로 상징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효용이나 추상적 노동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1) 마르크스의 미완의 '권력자본론'

좌파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을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며, 사회계급 간 권력관계를 자본의 본성으로 파악한다. 부연하면 자본을 생산에 투여되는 자본재 그 자체로서 보지 않고, 자본-임노동이라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품 생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착취의 기제로 본다. 이른바 M → C → P → C' → M'(혹은 M + △M)으로 표현되는 상품생산의 무한 순환과정 속에서, 유일한 가치 생산 주체인 노동은 그것이 창조해 낸 가치보다 적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자본은 그 나머지인 잉여가치를 착취해 (일부를 소비하고) 다시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을 추구한다. 이에 따르면 이 순환과정 밖에 있는 노동은 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며, 이 과정 밖에서 화폐가치를 지니는 다양한 재산 형태들은 진정한 자본이 아니다. 그래서 가령, 전업주부

의 가사노동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상품생산 순환과정 속의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낳지는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금융업이나 부동산업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생산되지 않고, 상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가 이전될 뿐이다. 예전에는 가치생산 과정을 너무 좁게 정의해, 유통업에서도 가치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좌파정치경제학계 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려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좌파정치경제학 쪽에서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입각한 자본개념이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장소는 분배와 교환의 영역이 아닌 생산과 노동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피케티의 자본개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철웅 2014, 86). 하지만 그 핵심에 위치한 상품가치와 축적된 자본가치의 원천이라는,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서의 모든 소득과 부의 본성이라는 추상적 노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량적 단위인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이 문제는 이른바 전형문제로 집약되어 표출되었다. 전형 문제는 화폐가치로 표현되는 현실의 가격체계를 추상적 노동의 투여량으로 측정되는 가치체계로부터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른바 불변의 가치척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마르크스를 포함해 보르트키에비치(Bortkiewicz), 빈터니쯔(Winternitz), 미크(Meek) 등 다양한 좌파학자들이 여러 수학적 기법을 동원해 해법을 모색했지만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다(Hunt 1979, 226-35).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노동가치론은 자본축적을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떠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피케티가 논점으로 삼았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노동가치론에 입각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성진(2005)은 국민계정에 나오는 고정자본투자, 노동몫, 이윤몫, 부가가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를 사용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류동민(2014)은 마르크스와 피케티의 유사성을 분석하는데, 전형 문제를 못 풀면 이런 시도가 모두 의미가 없다.[3] 이 값들은 모두 가격지표로서 이윤율의 경향적 변화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노동가치론의 방법론과는 무관하다. 말하자면, 설명되어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가치법칙에 따라 가격체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 요소들의 가격이 추상노동시간이 전형된 값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노동가치론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가격이 추상노동말고 다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 임금률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유기적 구성도가 증가하면 이윤율이 저하되지 않고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기각'한 오키시오(Okishio 1961) 정리도 마찬가지다. 현실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가격으로 표시된 것들뿐이기 때문이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주류경제학과 좌파정치경제학 모두 각각의 자본개념에 따른 '자본의 수량측정'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관점의 차이는 확연하지만, 실패의 원인은 비슷하다. 좌파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을 사회관계의 물화라고 정의했지만, 자본이 정치·이데올로기·국가와 맺는 총체적 관계 속에서 자본의 동학을 정식화하지 않았으며, 분석적으로는 물질적인 결정 요소인 이른바 '추상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자본재의 생산적 기여를 기각했지만, 여전히 일종의 '생산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치는 오로지 추상적인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으로, 이윤은 임금으로 지급되

3) 류동민(2014, 228-9) 자신도 그의 작업이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을 가치텀이 아닌 가격텀으로 확인해보기 위한 일종의 대리변수로서 구성된 것"이며, "자본의 정의 및 측정 문제를 사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 않은 잔여 노동시간으로, 축적은 그중 생산에 재투입되는 것(즉, 자본재)으로 정의함으로써. 주류경제학과 똑같이 물질적 투여를 금전적 가치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2) 권력자본론

닛잔과 비클러(2009)는 앞에서 살펴본 자본 수량측정 실패가 주류경제학과 좌파정치경제학의 물질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나온 자본개념과 가치이론에 기인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제도적인 권력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접근법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상품의 가격, 노동의 가격, 이윤, 자본의 가치 등 자본주의 가치체계를 투입요소의 생산적 기여에서 직접 도출하는 시도를 기각하고, 권력의 함수로 파악하자고 제안한다. 닛잔과 비클러는 이러한 자신들의 이론을 권력자본론이라 부르며, 생산의 영역에 갇힌 마르크스 자본론의 출구를 베블런(Veblen 1904; 1908; 1923)의 '산업(Industry)'과 '영리활동(business)'의 본성적 구분에서 찾는다. 베블런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을 산업과 비즈니스라는 본성적으로 다른 두 가지 인간 활동의 모순적 결합으로 구분하면서, 산업 활동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으로 규정하고, 비즈니스는 그 과정을 사적으로 장악하고, 그 통제력을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여 전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업 활동은 항상 공동체의 역사적 유산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의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기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산업은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사회적 생산으로서만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수학, 물리학, 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학, 공학, 예술, 다양한 사회과학 등 산업 과정에는 인류 공동의 지식과 창의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수많은 재료들과 부품들을 고려할 때 공동체 차원의 생산이라는 방식으로만 개념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생산물은 "마치 홀로그램처럼 인류 지식의 전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생산성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이다"(Nitzan, Bichler 2002, 34).

비즈니스는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활동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거해 작동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기까지 한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영리 활동 혹은 이윤의 추구이며, 영리 활동은 공동체적 생산인 산업을 사적으로 전유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권리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힘이다. 마르크스도 주목했듯이, 이러한 영리활동의 본성은 이른바 '울타리치기(enclosure)'로 상징화되었다. 권력자본론에서는 인클로저가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관통하는 핵심 기제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계급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사회질서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힘을 권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자본주의적 권력은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상품화하여 화폐적 가치로 전환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Nitzan, Bichler 2009, 325). 그래서 닛잔과 비클러(2004, 19)는 "사유재산 제도는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배제(exclusion)의 법령이며 권력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런 본성을 가치론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화폐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적 가치가 유용한 사용가치를 사회적으로 만들어 내는 산업 활동이 아닌, 산업을 배타적으로 장악해 내는

자본가들의 권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주의의 가치체계가 피지배계급인 노동자의 언어가 아니라, 지배계급인 자본가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가치체계가 산업 활동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생산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과정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르크스도 **가치**가 **사용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범주라고 말했지만, 가치의 원천을 권력 과정이 아닌 추상적 노동에서 찾으면서 미로에 갇혀버렸다. 생산의 주체와 가치 부여의 주체를 혼동한 것이다. 권력자본론에서는 자본주의의 모든 지표들은 '생산함수'가 아닌 '권력함수'의 결과물들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적 가치의 원천을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자본가들의 능력, 즉 베블런이 말한 **전략적 사보타주(strategic sabotage)**에서 찾는다.

베블런(Veblen 1923, 65-6)은 자본가들의 사보타주가 첫째, 산업 생산이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적 과정(mechanical process)처럼 유기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어느 한 부분에서의 생산 중지가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는 물질적 기초에 근거하고, 둘째, 산업 시설과 자연 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보장을 통해 소유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공동체의 생산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즉 자본일반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사보타주는 사회적 생산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과도한' 생산이 이루어지면 자본가들의 통제력이 줄어들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 압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공동체의 생산 능력을 일부러 낮잠 재워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지식소유권을 국내외에서 강제할 수 없다면, 이른바 지식경제로 불리는 산업은 이윤을 거의 내지 못할 것이다. 복제품이 넘쳐나, 사지 않고 이용할 가능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권력자본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가들에게 이상적인 조건인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는 거시적으로 사회의 생산 잠재력에 '적절한' 수준의 제한을 가해 이루어진다. 이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편으로 다른 자본가들이 자신의 사업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을 생산과정에서 배제시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생산 과정의 길목을 막고 받는 '통행세'가 이윤이다. 실제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위해 "약탈적 가격 책정, 공식적·비공식적 공모, 광고, 배타적 계약 체결 등의 직접 제한과 함께, 특허권·저작권법, 정부의 편파적인 산업 정책, 차별적인 조세 감면, 합법적 독점체, [반노동적] 노동 입법, 교역 및 투자 협정 혹은 장벽 등의 더 포괄적인 '정치적 수단 (물론 폭력·군사력을 포함해) 등 개인 차원부터 전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종다기한 방식들을 총동원해" 사보타주를 행사하고 있다(Nitzan, Bichler 2009, 247). 한국에서 재벌 대기업들 하청중소기업, 자영업,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맺고 있는 이른바 '갑을 관계'도 이러한 사보타주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상품의 가격, 기업의 이윤, 그리고 자본의 가치를 권력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가치체계는 자본가들이 사회에 대해 행사하는 상대적 권력을 화폐적 가치로 상징화한 것이다.

5. 차등적 축적 분석과 불평등의 심화

전략적 사보타주에 기초한 권력 자본 개념으로부터, 닛잔과 비클러는 **차등적 축적(differential accumulation)**이란 분석틀을 도출하는데, 피케티나 좌파정치경제학과는 아주 다른 자본주의 동학에 관한 분석적 경로로 들어서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차등적 축적은 말 그대로 자본의 축적을 위계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식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이란 구조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은 피케티와 좌파정치경제학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둘 모두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총량적(in aggregate) 분석이나 평균의 분석에 치중한다. 김공회(2014, 40-41)가 옳게 지적했듯이,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과 자산 관계의 총량적 혹은 평균값 비율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수익률들 간의 체계적 격차"나 소득의 분화에서 비롯된다. 총량적 접근방식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경쟁과 알력을 분석틀 속에 포괄하지 못하고, 분석을 통해 드러내야 할 권력의 본성인 차등적 위계화를 간과하거나 오히려 감춰버리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차등화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권력자본론의 자본축적 분석틀은 이런 권력의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원심력 운동을 통해 점점 더 상품화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권력의 형태를 자본주의 시장적 위계질서 속으로 흡수해 왔고, 동시에 전략적 사보타주를 통한 구심력 운동으로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함께 자본권력의 집중과 집적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의 핵심 동학인 경쟁은 자본가들이 권력을 놓고 벌이는 각축전이다. 이러한 권력의 운동은 "인력과 척력" 모두를 발생시켜, 자본가들 사이에서 멘커 올슨(Olson 1982)이 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분배 연합(distributional coalition)'의 쉼 없는 형성과 재형성을 촉발해 냈다. 이러한 권력의 역동성은 "사회적 과정의 핵심을 장악해" 가장 강력하고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주도적인 기업-정부 연합"인 **지배적 자본(dominant capital)**을 형성시켰다(Nitzan, Bichler 2009, 40).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은 이러한 지배적 자본의 형태라 할 수 있는 콘체른, 게이레츠, 재벌, 콘글로머레이트, 금융지주회사 등의 팽창과 궤를 같이 했으며, 그에 대한 소유권과 이윤청구권을 통해 핵심 자본가 집단이 사회적 생산의 결실을 독식해 왔다.

권력자본론에서는 이 권력의 동학을 가시화하기 위해, 두 가지 자본 축적의 조건을 검토하자고 제안한다. 첫째는 전체 자본소득 비중이나 자산가치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는가의 여부이고, 둘째는 지배적 자본(dominant capital) 그룹의 평균 시장가치(혹은 이윤)를 전체 시장평균에 대비해 측정한 값을 의미하는 차등적인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전자는 이른바 자본일반과 사회와의 역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후자는 자본 내부의 역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Nitzan, Bichler 2009, 311).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두 가지 지표 모두 중요하지만, 닛잔과 비클러는 자본일반의 소득과 자산의 비중보다는 차등적 축적의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일반 차원에서의 사회관리도 중요하지만, 자본의 동학이 권력의 상호배타적 본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닛잔과 비클러(Nitzan, Bichler 2002, 11)는 권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 때문에 "자본가는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다른 자본가들보다 더 많이, 즉 평균을 깨고 올라서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자신들의 자산이 성장하는 속도와 평균 성장속도와의 차이로 차등적 축적을 측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4)]

차등적 축적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 권력자본론에서 자본축적(즉 M + △M)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시장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시장가치의 변화는 "자산이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적 가치로 할인된 값"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Nitzan, Bichler 2004, 18). 이러한 입장은 다음의 네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 아래의 등식 ①로 정리할 수 있다.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1)미래 수익의 흐름(future earnings), (2)미래 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과열된 정도(hype), (3)기대수익에 연관된 위험 요소(risk), 그리고 (4)일반적으로 시장의 정상수익률을 이용해 기대 수익을 현재적 가치로 전환할 때 쓰는 할인율(discount rate)이다.

$$① \ \text{자본화} = \frac{\text{기대수익} \times \text{과열정도}}{\text{위험} \times \text{정상수익률}}$$

이러한 자본화의 알고리듬 자체는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델(CAPM) 같은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류에서는 이를 '과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닛잔과 비클러는 자본화 알고리듬을 자본주의 '종교의식(ritual)'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본가 지배집단이 종교적 신념처럼 숭상하는 지표로서, 그들은 이를 기준으로 사회를 재조직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국가 기구를 통한 법적·제도적 변화, 이에 대한 다른 사회집

4) 이윤의 높고 낮음은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00퍼센트 수익률은 높은 수익률인지 낮은 수익률인지는 그 자체로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업계의 평균 수익률이 50퍼센트라면 높은 수익률이지만, 만약 평균 수익률이 150퍼센트라면, 낮은 수익률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준거 기준을 넘어서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단들의 저항을 필히 수반하므로 권력적 과정이다. 다시 말해, 자본화는 이러한 권력적 과정을 시장에서 끊임없이 재평가하면서 이루어진다. 어떤 시기는 과도한 희망(hype)이 지배하여 가치의 '버블'이 생기고, 어떤 시기는 과도한 공포(fear)가 지배하여 폭락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시기에는 예측한 수익흐름과 정상이윤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치 '과학적' 계산이 가능한 듯 보이기도 한다. 이 모든 국면을 포함해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이 종교의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과정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의식의 보편화는 자본일반의 소득과 부의 안정적 유지와 팽창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을 추동하는 동학은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펼쳐지는 배타적 경쟁에서 나온다. 그래서 피케티가 구한 역사적 r값은 차등적 축적을 위한 싸움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일반이 준거점으로 삼는 특정한 수준의 이윤율이 공유됨과 동시에 소득과 부가 점점 더 사회적 과정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적 자본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 권력자본론에서는 이 동학의 핵심을 포착하기 위해, 지배적 자본의 차등적 축적을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차등적 축적은 지배적 자본 그룹에 속한 전형적 기업의 자본화와 전체 기업세계의 평균 자본화 비율로 정식화할 수 있다.

이를 $DK(\text{차등적축적}) = K_D/K$ 등식으로 표현한다(Nitzan, Bichler 2009, 327-8). 여기서 첨자 D는 지배적 자본을 의미하고, 첨자가 없는 요소는 평균 기업을 가리킨다. 이 등식을 위에서 언급한 자본화 공식의 세부 항목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자본화 공식은 $K=(E\times H)/(R\times\delta)$, 즉 (기대수익*과열 정도)/(정상수익률*위험률)로 구성된다. 여기서 정상이윤율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배자본과 평균 기업의 비율을 구하면 1이 되기에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차등적 자본화는

다음의 세 가지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1)이윤을 차등적으로 높이는 방식(E_D/E), (2)투자자의 기대지수를 차등적으로 높이는 방식(H_D/H), (3)위험률을 차등적으로 낮추는 방식(δ_D/δ).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첫 등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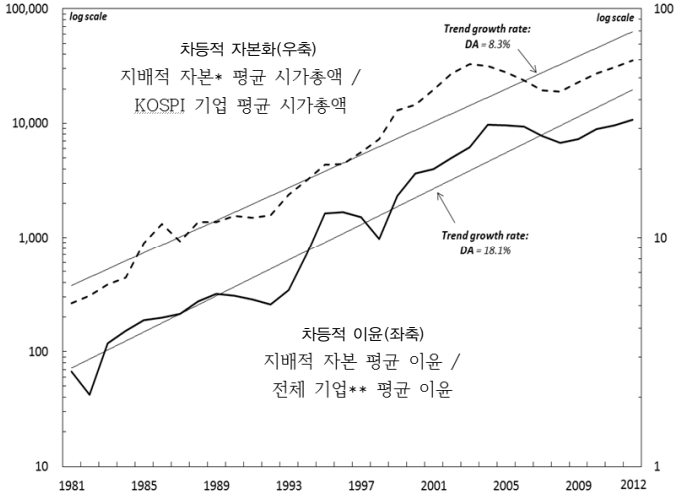
$$② \quad DK = \frac{K_D}{K} = \frac{(\frac{E_D}{E}) \times (\frac{H_D}{H})}{\frac{\delta_D}{\delta}}$$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차등적 이윤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의 기대지수는 주식시장에서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장기 축적체제를 분석할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일시적으로는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 추세를 몇 년 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 기업의 투자 리스크는 자본화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수량적 분석에서 데이터를 이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기 축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지표로 차등적 이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Nitzan, Bichler 2009, 329).

〈그림 1〉은 이러한 자본의 차등적 축적 분석을 한국 지배적 자본의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에 적용해 예시한 것이다. 이 집단의 차등적 이윤과 자본화의 추세가 규모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1981년~2012년에 피어슨 계수가 0.88) 보임을 알 수 있다. 규모의 차이는 비교집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차등적 이윤은 이 세 기업의 평균 순이윤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 순이윤으로 나누어 구한 것이고, 차등적 자본화는 세 기업의 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그림 1〉 자본의 차등적 권력과 차등적 축적 분석의 예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 국세청 소득신고 법인 기업들 중 적자를 보고한 기업들은 제외함
주: 모든 데이터는 3년 이동평균값으로 표현
자료: Park(2015/10)

가총액 평균을 전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평균으로 나누어 구했다. 시가총액 비교집단인 코스피 상장기업들이 전체 법인기업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적 이윤과 시가총액의 규모에 확연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를 감안하고 보면, 1980년대 초, 상위 세 기업들의 차등적 자본화는 5배(397억 원 : 77억 원)였는데, 2010년대 초에 이르면, 60배(91조 원 : 1.4조 원)가 된다. 그동안 세 기업들의 힘이 코스피에 속한 기업집단들보다 상대적으로 12배 더 강해진 것이다. 기업 집단 전체와 비교한 이윤 쪽을 보면, 1980년대 초, 상위 세 기업들의 차등적 이윤은 67배(76

억 원 : 1.1억 원)였는데, 2010년대 초에 이 값은 약 10,000배(7.3조 원 : 6.8억 원)로 커진다. 30년 동안 150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매년 18.1퍼센트의 속도로 차등적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권력자본론에서는 이것을 이 기간 동안 지배적 자본의 사회 지배력이 그만큼 강해졌음을 가시화해주는 지표로 보자는 것이다.

피케티가 확인한 부와 소득이 최상위층으로(10%로 잡든, 1% 혹은 0.1%로 잡든) 집중되는 현상은 지배적 자본의 차등적 축적이 강화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불평등은 가계 또는 개인 간 차등적 소득과 부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으로 포착되어야 하지만, 그 동학은 사회적 과정을 통제하고 운영해 나가는 지배적 자본의 축적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건희, 정몽구, 신동빈 같은 세습 부자들이건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주커버그 같은 자수성가형 부자이든 상관없이, 소득과 부의 피라미드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들은 모두 지배적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가는 미국의 500대 기업 전문경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5] 노동 내부에서의 소득분화도 마찬가지로 지배적 자본의 형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자본의 배타적 운동이 "거대 사업체와 조직화된 노동"을 한편으로 하고, "소규모 사업 집단과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이중정치경제**(dual political economy) 구조를 확립하면서, 그들 간에 체계적인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온 것이다(Nitzan, Bichler 2002, 1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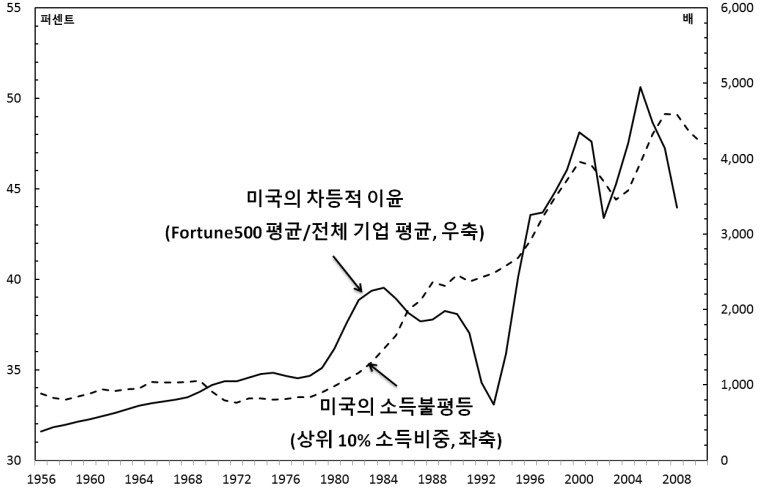
〈그림 2〉는 피케티가 강조한 미국의 상위 10%로의 소득 집중과 차

---

5) *Forbes*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 500대 기업이 CEO 연봉으로 총 52억 달러(약 6조 원), 평균 1천 50만 달러(약 120억 원)를 지급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상위 열 명의 CEO 1년 보수는 평균 6천만 달러가 넘었다(http://www.forbes.com/pictures/eggh45jef/highest-paid-bosses/#gallerycontent 참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그림 2〉 차등적 축적과 불평등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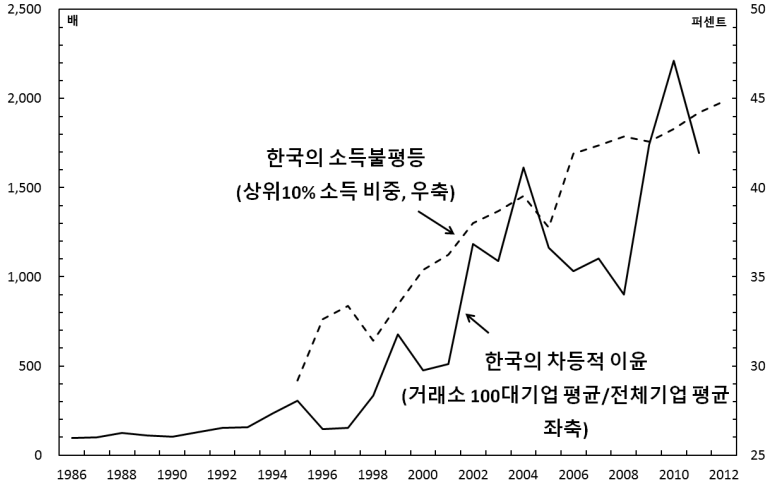
주: 모든 데이터는 3년 이동평균값
자료: 포춘500(Fortune 500); 미국 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 미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피케티 21세기 자본 데이터 제공 웹사이트

등적 자본축적이 실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의 점선은 미국 상위 10퍼센트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실선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평균이윤과 미국 기업 전체 평균이윤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1956~2006년 사이에 미국 지배적 자본의 차등적 이윤은 약 12배(즉 평균 대비 384배에서 4,477배로 증가) 강화되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퍼센트의 소득비중은 34퍼센트에서 48퍼센트로 14퍼센트 포인트 높아졌다. 두 그래프는 피어슨 상관계수 0.899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커플링'을 보이고 있다. 배당금, 이자, 연봉 등 형태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상위 10%의 소득이 어떤 식으로든

지배적 자본과의 관련을 맺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이런 상관관계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림 3〉은 한국에서의 소득집중과 지배적 자본의 차등적 이윤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선 그래프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해당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순이익을 국세청 법인세 신고 기업 중 해당년도 적자 기업을 제외하고 흑자를 낸 기업들만의 평균 순이익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한국 지배적 자본의 차등적 이윤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 그래프는 김낙년(2014)이 피케티 방식을 도입해 구한 한국 상위 10퍼센트의 소득비중을 인용해 표시한 것이다. 김낙년의 자료에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데이터가 존재하

〈그림 3〉 한국의 차등적 축적과 불평등



자료: 국세청; KIS-VALUE; 김낙년 2014(World Top Incomes Database)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 않아, 그 이후부터의 데이터만 살펴보겠다. 1995년에 약 300배 수준이던 기업 전체 평균 이윤 대비 100대 기업의 평균 이윤이 2010년에는 2,213배로 확대되었다. 약 7배의 차등적 이윤의 확대가 있었던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 상위 10퍼센트의 소득비중은 29.2퍼센트에서 43.3퍼센트로 14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시계열이 짧아 미국 사례처럼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수준을 말할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의 소득 집중 현상이 한국 지배적 자본의 차등적 이윤 팽창과 궤를 같이 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다.

권력자본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지표로 포착되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그룹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지배력 차이가 확대된 결과이며,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이른바 '갑을 관계'의 노골화 현상은 이를 잘 보여주었다. 자본과 노동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간에 힘의 격차 확대가 곧바로 '파이 분배'의 불공정성 심화로 나타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갑을 관계 피라미드의 정점에 한국의 지배적 자본인 재벌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관계망 속에서 지배적 자본이 전체 소득 분배의 일반 규칙을 규정한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목표하는 이윤을 먼저 설정하고, 관계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정해준다. 1차-2차-3차의 연속적 하청관계 속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차등적으로 나누어 갖고, 그 사슬 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과 다를 바 없는 소득을 올리는 프렌차이즈 자영업 사장님이 알바생과 최저임금을 주네 못주네 하며 옥신각신 살아가고 있다. 이 '먹이 사슬'의 핵심에 위치한 지배적 자본의 차등적 이윤 증가와 그것을 소득원천으로 삼고 있는 상위 10퍼센트로의 소득 집중이 나란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기본 동학인 위계적 질서의 확립을 어떻게 포착해 지표로서 가시화할 것인가란 문제인데, 권력자본론의 차등적 축적 분석은 그 중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6. 나가며: 몇 가지 논점의 정리

지금까지 닛잔과 비클러의 권력자본론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자본개념, 축적 분석방법론, 그리고 자본주의 불평등 동학을 살펴보았다. 권력자본론은 자본 축적의 원천을 생산이 아닌 생산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를 가진 전략적 사보타주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주류경제학뿐만 아니라 좌파정치경제학과도 확연히 다르다. 이 입장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생산의 정체는 자본축적의 둔화를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적을 강화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전략적 사보타주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 전체에 대해 가해지는 자본일반의 제약을 의미하는 보편적 사보타주와 자본 내부에서 권력의 몫을 놓고 펼치는 경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배제를 의미하는 차등적 사보타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권력자본론에서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의 변화를 분석하여 사회 전체에 대한 자본일반의 권력 확대 여부를 파악하고, 차등적 축적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자본 세력의 권력 변화를 파악할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권력자본론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해 제기되었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색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중 하나로 자본의 물질적 수량과 금전적 가치를 연결해야 할 난제가 사라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주류경제학에서는 효용을, 좌파정치경제학에서는 추상적 노동을 가치의 본질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둘 다 물질적 실체와 금전적 수량 사이의 등식을 도출하지 못하면 전체 이론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 권력자본론은 자본의 가치가 생산과정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물질적 수량이나 생산성의 함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함수, 즉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 전체를 놓고 펼쳐지는 사회그룹들 사이의 역관계가 가격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치-가격 전형'이란 과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굳이 증명하기 힘든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이란 형식만으로도 자본축적의 권력적 본성을 드러내는 분석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인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본의 가치는 시장에서의 자본화에 의해 결정되며, 형식적으로는 보통 (기대이윤 × 투자자의 기대지수) / (정상이윤율 × 위험률)의 공식으로 그 '적절성'이 평가된다. 이 요소들은 상품의 물질적 효용 그 자체에 대한 기대와 판단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사회세력 사이의 정치적·법적·제도적 싸움을 대변한다. 가령, 새로운 신약을 발명한 기업에 대한 기대이윤이 높아지는 경우에, 우리는 그 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롭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존재하는가에 기초해 이윤 전망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기업의 사보타주 능력, 즉 다른 제약회사들은 같은 약을 생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능력이 여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 수단이 바로 특허권 제도인데, 법제도의 완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행정력과 공권력도 그 안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에이즈 치료제 AZT, 비아그라, 타미플

루, 글루백 등의 복제약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가격하락 압력이 발생해 유명 국제제약 회사들의 이윤은 곤두박질칠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법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기구들, WTO, 외교통상 정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도와 기구가 제약회사 이윤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대기업-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에서처럼 기업의 이윤에는 자본들 간의 역관계가 반영된다. 임금을 놓고 벌어지는 노동-자본 간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다. 비용 축소가 직간접적으로 이윤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용과 이윤 모두 사회적 과정에 대한 상대적 지배력이 규정하므로, 상품의 가격은 '권력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권력자본론의 관점에서 보면, 피케티의 자본 개념에 부동산 포함 여부에 관한 논란은 별 문제가 못된다. 권력자본론에서는 자본재를 의미하는 '진짜 자본'과 금융자본이나 부동산을 의미하는 '의사자본'의 구분이 불필요하다. 베블런(1923)을 따라, 모든 자본의 본성을 부재소유(absentee ownership)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본소득을 지대(rent)로 본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은 위에서 설명한 산업과 영리활동이란 범주 구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자본가들은 산업 활동을 하지 않고, 채권과 주식이란 형태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이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결실을 전유하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들과 같이 경영에 참여하는 자본가들은 이 분류 체계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산업 활동이 아니라 권력적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증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재벌 경영자들의 주된 임무가 정치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자본소득 전체를 지대로 본다면, 부동산을 포함시킨 게 피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티의 오류가 아니다. 포함시키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론적 정식화에서는 본래의 의도였던 지대추구 세습자본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전제를 깔고 있는 주류경제학의 생산함수를 사용한 것이 문제다. 좌파정치경제학에서는 가치가 창조되는 생산영역과 그것이 나뉘는 분배영역을 구별하기 때문에 생산적 자본과 비생산적 자본을 구분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그 자체의 논리로 따져도 별 필요가 있다. 첫째, 가치는 노동만이 창조하기 때문에, 생산적 자본도 가치 창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둘째, 산업 자본가도 생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바탕으로 잉여가치를 착취한다. 마르크스도 자본가를 '지주'로 본 것이다. 권력자본론에서는 자본소득을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이 화폐적 상징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산적 자본'의 소유자들과 '비생산적 자본'의 소유자들의 소득이 본성상 다르지 않다고 본다. 둘 다 사회적인 삶의 과정에 '사보타주'를 가할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이윤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GDP통계에는 자가주택 귀속임대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통계분석에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권력자본론의 차등적 축적 분석은 피케티가 불평등의 동학을 자본 간 수익률 차이나 소득의 격차처럼 자본주의 핵심 원리인 경쟁을 반영한 지표가 아닌, $r > g$와 같이 총량이나 평균값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지적을 해결해 준다. 피케티는 압도적인 수준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부와 소득의 집중, 특히 상위 1퍼센트 특권층으로의 집중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현상임을 보여주었지만, 주류경제학의 생산함수에 의존한 이론적 정식화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회정치적 맥락을 배제시키고, '성장률 저하'가 불평등 심화의 근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비(Harvey 2014, 84)의 말처럼, "피케티가 수학적 법칙

처럼 정식화한 것은 관련된 계급 정치를 밝혀주기는커녕 감춰버리는 성격이 강하다.” 닛잔과 비클러의 권력자본론은 기업이윤과 자본축적이 생산적 활동이 아닌 자본가 계급의 전략적 사보타주라는 배타적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분석의 초점을 지배적 자본에 맞춤으로써, 자본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세력을 전면에 드러낸다. 그를 통해, 지배적 자본가계급들의 수중에 집중되는 소득과 부의 반사회적 성격을 밝힐 수 있게 해준다.

참고문헌

김공회. 2014. “99%를 위한 경제학인가, 9%를 위한 경제학인가.” 김공회 외.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 서울: 바다출판사. 11-70.

김낙년. 2014.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낙성대경제연구소 Working Paper 2014-08.

류동민. 2014. “마르크스 이후의 피케티 혹은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1권 제3호. 224-240.

유종일. 2014. “자본주의와 불평등: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하여.”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21-234.

이정구. 2014. “피케티의 자본주의.” 김공회 외.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 서울: 바다출판사. 105-126.

정성진. 2005.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서울: 책갈피.

최철웅. 2014. “불평등인가, 착취인가.” 김공회 외.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는가: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 서울: 바다출판사. 71-104.

피케티, 토마(Thomas Piketty). 2014. 『21세기 자본(2013)』. 장경덕 역. 서울: 글항아리.

홍 훈. 2014. "피케티의 소득분배 가설에 대한 이론사적인 조망." 『사회경제평론』 제45호. 133-159.

Bonnet, Odran, Pierre-Henri Bono, Guillaume Chapelle, and Etienne Wasmer. 2014. "Does housing capital contribute to inequality? A comment on Thomas Piketty's Capital in the 21st Century." SciencesPo Economics. Discussion Paper 2014-07.

Callinicos, Alex. 2014. "Piketty's theory of capital: strengths and weaknesses." *International Socialism*. Issue 143. 177-185.

France24. 2015. "Economist Thomas Piketty refuses France's top honour." (2015/01/02).

Galbraith, James K. 2014. "Kapital for the Twenty-First Century?" *Dissent Magazine*. Spring. 77-82.

Harvey, David. 2014. "Afterthoughts on Piketty'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allenge*. 57(5). 81-86.

Hunt, E. K. 1979.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 Critical Perspective*.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Hunt, E. K., and M. Lautzenheiser. 2011.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 Critical Perspective*. Armonk, New York: M.E.Sharpe.

Mankiw, N. G. 2015. "Yes, r > g. So what?" *American Economic Review*. 105(5). 43-47.

Nitzan, J., and S. Bichler. 2013. "Can Capitalists Afford Recovery?: Economic Policy When Capital Is Power." *Review of Capital as Power*. 1(1).

110-155.

_____. 2009. *Capital as Power: A Study of Order and Creorder*. Routledge.

_____. 2004. "New Imperialism or New Capitalism?" mimeograph. www.bnarchives.net.

_____. 2002.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Pluto Press.

Okishio, N. 1961. "Technical Changes and the Rate of Profit." *Kobe University Economic Review*. 7. 85-99.

Olson, Mancur.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ark, Hyeng-Joon. 2015. "Korea's Post-1997 Restructuring: An Analysis of Capital as Power."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OnlineFirst doi:10.1177/048661341559414.

Ray, Debraj. 2014. "Nit-Piketty: A comment on Thomas Piketty's *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 mimeograph(May 23).

Roberts, Michael. 2015. "Thomas Piketty and the Search for r." *Historical Materialism*. 23(1). 86-105.

Rowthorn, R. 2014. "A Note on Piketty'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entre for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Working Paper No. 462.

Soskice, David.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ritiqu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5(4). 650-666.

Sraffa, P. 1960.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engely-Evans, Tomáš. 2014. "Piketty and Marx." *International Socialism*. Issue 143. 177-185.

Veblen, T. 1923. *Absentee Ownership: Business Enterprise in Recent Times*. Transaction Publisher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_____. 1921. *The Engineers and the Price System*. Harbinger.

_____. 1908. "On the Nature of Capita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2(4). 517-542.

_____. 1904. *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New Brunswick/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영문초록

Radicalizing Piketty from a Perspective of Capital as Power

Park, Hyeng-Joo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Institute

Paul Krugman, a Nobel laureate economist, hailed Thomas Piketty'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s a revolution in our understanding of long-term trends in inequality. Indeed, by tracking the concentration of income and wealth back to the late eighteenth century, it has disproved the Kuznets' curve, one of the key ideological pillars of capitalism. Moreover, reigniting debates about growing inequality not only in the US, but also elsewhere, Piketty's book lives up to its name, which echoes Marx's *Capital*.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his theoretical work in the book meets the challenge posed in its title. Ignoring century-long debates on the problematic notion of capital, including the Cambridge capital controversy, Piketty has tried in vain to derive capitalist laws of motion (i.e. growing inequality) from the *production function*. As the saying goes,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bottles." This paper tries to reinterpret Piketty's revolutionary empirical analysis on inequality from the viewpoint of Capital as Power.

■ **Key Words:** inequality, capital as power, differential accumulation, Piketty

투고: 2015.9.23 심사: 2015.10.20 확정: 2015.11.19